

문화로서의 정치—그 희망의 정치학

‘문화와 정치’를 생각한다

朴燦鍾

국회의원 · 무소속



박찬중 의원

“오늘의 시대가 비록 민주화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반문화적 특징으로서 분열증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 민주화시대를 역사적 소산으로 간직하려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희망있는 국민을 위해 한국정치는 거듭 태어나야 한다.”

1. 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정치

문화란 언어·풍습·예술 등 사회적 공통성과 공감성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란 시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의해 그 내용이 결정된다는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역사적 因果性이 복잡하여 동서양의 문화가 혼재하는 경우, 그 복잡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인간—국민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혼돈 속에 방황하게 된다.

특히 문화가 동질성(Id entification)과 주체성(Subjectivity)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때 격동기 혹은 전환기에 속해 있는 사회는 문화적 가치의 확립이 先次的의 과제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와같은 현상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현실적 상태라 할 수 있다.

문화를 ‘동질성’으로 파악할 경우에 전통문화, 고유문화를 뜻하는 것으로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경험적으로 축적된 ‘일반적인 그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轉用될 때 갖는 의미는 과거 속의 장점, 즉 ‘溫古而知新’의 정신으로 정치에 임하는 것이다. 우리의 전통적 기질로서 ‘선비정신’이나 ‘충효정신’의 가치 위에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이를 실현하려고 하는 정치가 곧 전통적 정치의식으로서의 문화성을 뜻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문화는 농경사회적 정치가치관이고 禮와 德을 숭상하는 유교적 정치관인 관계로 산업화과정에서의 국가운영에는 한계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의 봉건제 치하에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치하로 이어졌다가 국제사회의 역학관계로 인한 ‘중진—분단—독립’으로 발전했다. 일반적으로 유럽식 국가생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즉 시민혁명, 혹은 명예혁명과정을 통해 산업국가로 발전하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추구한 역사적 경험이 없이 美·蘇 양대국의 이데올로기 사회체제가 주입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관습과 전통에 의해 잠재되어 있는 민족문화와 변혁체제의 사상적 배경이 되어 있는 서구문화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관에 대한 새로운 수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역사적 요구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데, 이는 ‘문화적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제기된다.

문화적 주체성이 문화적 동질성과 다른 차이점이 곧 문화와 정치의 관계를 정립하는 기본요소라 할 수 있다. 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동질성은 이미 주어진 사회적 규범, 예규 등으로 정치를 통제한다. 그러나 문화적 주체성으로서 정치를 인식할 때 정치는 문화적 가치관을 수립, 수정, 확립하는 주도적 기능으로 여기게 된다.

즉, 문화의 주체성은 과거의 규범 속에서 오늘의 상황을 판단,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 어떤 사회적 가치관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결정(또는 국민적 합의)을 뜻한다. 이러한 결정은 문화현상으로 나타난다.

1970년대가 원칙없는 소비문화현상을 초래했다면 1980년대는 민주화가 보편적인 문화현상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민주화가 단순히 정치적 활동내용이 아니라 하나의思潮로서 문화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민주화과정의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혼란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사회는 혼란성 문화가 시드롬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는 삶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의해 제어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정치는 문화운동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어해야 할 책임이 있고, 문화의 상징적 요소로서 정치行態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주체성으로서의 일반문화는 정치문화와 質量的 공통점을 갖게 되므로 정치는 통치기술적 차원을 훨씬 초월한 문화운동의 핵심분야로 인식해야 한다.

2. 문명과 문화에 대한 정치적 해석

문명은 집단사회의 편익성을 위해 존재한다. 문화가 역사적 가치관의 소산이라면, 문명은 역사적 편익성의 소산이다. 우리는 ‘기계문명’이라는 말은 사용해도 ‘기계문화’란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문명이 집단적 편익함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문화는 집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총체적인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문명은 있고 문화가 없는 사회현상을 빚고 있다. 고도산업화현상은 있고, 공동가치현상—共同善을 위한 사회적 自淨力은 없다.

문화의 최정에 상징물인 예술조차도 물질소

유의 한 대상으로 전락한 사회에 있어서 문화는 문명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어떤 문명의 이기를 소유하고 사느냐가 인생의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에 있어서 인간의 문화적 삶은 생존의 기본조건이 될 수 없다.

이와같은 현상은 휴머니즘이 문화의 근본바탕이 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민주화가 문화운동 방향의 좌표가 될 수도 없다. 문화적 가치—사회적 목표를 올바르게 설정할 수 있는 정치역할이 수행될 때에 한해서 문명은 단순한 소유대상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편익—공동의 편익성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치는 인간역사의 2대 요소인 문명과 문화에 대한 조정자로서 혼돈으로부터 질서로, 혼란으로부터 안정으로 사회를 발전시키는 주된 임무를 가지고 있다.

특히 문명과 문화가 완전한 이분법적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고 할 때, 문화와 문명이 갖는 각각의 특징적 요소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한 양대 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간의 사회가 구조적으로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사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 관계 속에서 소외와 모순과 부조리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그 결과 인간의 실존적 문제가 형이상학적으로 용해될 수 없게 되는 한계를 초월할 때, 인간은 자신이 생존하고 있는 사회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명의 논리를 등장시키게 된다.

인류는 지난 1세기 동안에 인간사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근본적인 문제들, 불평등·부자유·비인간화 문제 등에 대해 도전해왔고 더 이상 神이나 초자연적 현상 혹은 형이상학적 세계에 의존하여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流血의 혁명기를 거쳐 아직도 그 대립은 심각하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유발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심각한 불평등, 부자유, 비인간화 현상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기존의 논의로는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하여 사회주의화로 바꾸어보자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태라고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문화적 동질성—전통, 관습, 풍습 등만 가지고 있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동질성 문화로서는 사태를 수습할 수 없는 사회적 변동기에 이르



렀으나, 우리는 이를 적절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적 변모를 취하지 못하고 문명적 발전에만 해결의 방안을 위임하였다. 보다 더 고도산업사회가 되기만 하면 이와같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인간의 물질화—기계화를 촉진함으로써 인간내면적 욕구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문제는 물질화의 대상이 아니다. GNP 3,500불에서 5,000불로 성장했다고 해서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관이 더 성장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가치관(도의성, 윤리성, 인간화 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고도산업화는 사회적 불평등, 부자유, 비인간화를 더욱 심화시켜 반문화적 가치관(질적 욕구의 증대, 경제적 소유관념, 多所有에 의한 상대우위적 편견 등)을 현실적 당위론으로 인식케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화적 동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화적 주체성을 정립하는 정치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것인가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문화로서의 정치는 사라지고 기술로서의 정치만 남게 되는데, 그 결과는 오늘의 혼란상도 극복하지 못하고 내일의 안정된 사회도 가져오지 못해서 종내에는 유형적 대결과 역사적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정치가 문명과 문화의 중재자로서 사회적 공동인식에 바탕을 둔 문화로서의 정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3. 문화로서의 정치—그 희망의 정치학

정치의 최고목표는 사회와 개체 간에 갈등 없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유토피이다. 그런 곳은 없다는 뜻의 유토피이다. 그러나 인류역사의 어느곳 어느때이건 사회와 개인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었다. 여러 개체간의 갈등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고 인류 파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도 또한 진보하거나 침한다. 따라서 정치는 갈등의 첨예한 대립 그 자체이며, 인간 사회의 가장 중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치적 해결이란 '파워 게임' 혹은 권력적 방식의 해결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 해결의 방식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해결의 결과는 문화적 해소의 결과로서 나타나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 첨예한 대립으로 나타나 있는 5공청산, 광주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찬가지로 범주에 속하는 문제들이다. 5공·광주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몇몇 관련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재산을 환수하는 것으로 종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정치를 묘수풀이의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된다. 문화적 관점에서 5공과 광주문제들을 해결한다면, 권력형 부조리와 정경유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회적 관습을 정착시키는 것이다. 몇몇의 보완적 제도의 수립만으로써는 이를 창출하지 못한다. 국민 전체가 본질적인 가치—문화적 가치를 바꾸고 사회규범을 새로 정립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노사분규, 민주화추진의 갈등, 학원문제

등 모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이 바로 정치이다.

오늘 우리는 왜 수많은 갈등의 원인을 지니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 누가 묻는다면 그 이유는 분명하다. 문화적 가치—주체성이 없는 역사적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화적 주체성—타국과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주체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사적 결정에 의한 주체성이 있다면 우리는 가치있는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민주화가 비록 이 시대의 문화적 특징이지만, 아직 우리는 첨예한 대립을 문화적 정치로써 풀어갈 수 없기 때문에 혼돈과 혼란 속에 싸여 있는 것이다.

최근 정계에서는 여·야 할것없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정치를 하자고 한다. 그러나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치유로서의 정치만을 생각하는 소승적 治道다. 이러한 정치의식으로써는 결코 만족할 만한 대승적 治道로 나아갈 수 없다. 대승적 정치의 첫걸음은 국민이 희망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다. 개체의 이상과 사회의 목표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살아남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가치있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인간사회'를 창조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사회는 첨예한 대립을 합리적으로 풀지 못하고 폭력과 좌절과 증오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이것은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한 결과이다. 정치가 어느 일방의 우세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동안은 소강상태를 만들 뿐이지 변영과 평화를 위한 사회를 창출할 수 없다. 정부·

여당에 의해 주도되는 정국만이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무자비한 탄압을 정치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때, 그것이 과연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大權을 우리측이 장악했을 때 민주화를 할 수 있다고 분열하는 야당이 과연 가치가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오늘의 시대가 비록 민주화라는 문화적 특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가장 반문화적 특징으로서 분열증세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이 민주화시대를 역사적 소산으로 간직하려면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문화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단결이다. 강제에 의한—統一이 아니라 조화있는 통합이어야 한다. 모든 대립관계를 서로의 입장이 도덕적으로 존중되는 가운데 조화를 꾀하는 인간적 정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국민은 안심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1980년대가 민주화의 시대라면 1990년대는 통일의 시대이다. 지금 調和의 문화를 키우지 않으면 90년대의 통일시대는 절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는 첨예한 대립을 조화시키는 정치문화가 정착될 때 희망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이다. 희망있는 국민을 위해 한국정치는 거듭 태어나고 깨치고 나가야 한다. 단결과 통합을 하나의 문화로 삼고 도덕의 거름 속에서 솟아오를 때 민족의 통일도, 위대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도 가능한 것이다.

(※이 글은 개인의 수상적 글로 작성된 것임만큼 여러 전문학자들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옹해시킨 것이므로, 전문적인 논문처럼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양해 바랍니다. =필자)

표지의 말

경상남도 거창의 셋별국민학교는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유별난' 학교이다.

문교부에서 내려오는 획일적인 지시를 학생들과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자 스스로의 이상에 맞도록 변형해서 받아들인다. 물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이 학교가 무엇보다도 중요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율과 자발성이다. 교장은 학부모

들에게 "학생들이 학교에 꼭 출석하는 것만이 공부라 아니다"고 말하며, 다른 지방이나 도시의 친척집을 방문하는 것도 '산 교육'이며 '큰 공부'라고 강조한다. 그럴 경우 학교에 결석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그런지 학교의 분위기는 늘 자유롭고 활기에 넘쳐 있다.

셋별국민학교 아이들의 눈빛은 언제나 셋별처럼 빛난다.

(사진·글 姜運求)